

사법시험준치 - 각계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신속히 정하겠다

최근 사법시험 준치 문제가 정치권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력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8일 사법시험 준치 여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김현웅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사법시험 준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묻는 김관영(지역구, 전북 군산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현웅 장관은 “현재 (국회에) 사시준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과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며 “사법시험 준치 여부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단체와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 등 사회 각계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다음 검토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사법시험 준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묻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현웅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사건임을 전제로 “사시 인원을 좀 줄더라도 어느 정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은 선발인원 감축 로드맵에 따라 해마다 선발인원을 줄여왔고 내년 1차시험을 마지막으로 2017년 최종 폐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사법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사법시험 준치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